

특별조정교부금 편성 중단에 전남광주시의회 ‘뒤숭숭’

민형배 시장, 교부금 편성 원칙 재확립 지시

의원들 “현안사업 해결·의정활동 위축 우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관행적으로 광역의원에게 배분하던 특별조정교부금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의회 내부가 뒤숭숭하다.

지역구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의정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투명한 민원 해결 과정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의회 등에 따르면 민 시장이 최근 특별조정교부금 편성 원칙의 재확립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역별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은 물론 관행적으로 광역의원에게도 배정돼 왔으며, 의원들은 이를 재해 대응, 공

공시설 보수 등 지역의 현안을 살피는 의정활동에 이용해 왔다.

그러나 특별조정교부금은 의원재량사업비, 의원포괄사업비 등으로 불리며 선심성 특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민 시장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대한 원칙을 세우기로 한 것은 시정질문이 발단이 됐다.

지난 13일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조직개편안 처리 과정을 질의하며, 집행부가 특별교부금 150억원으로 의원들 표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도의 집문을 던져서다.

당시 민 시장은 “그런 뜻이 아니다. 시·구·군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가능하면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의미였다”며 “앞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이 막힐 상황에 놓이면서 의회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분되지 않으면 지역구 활동 등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며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관계가 계속될 경우 본예산 편성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초선 의원은 “조선의 경우 의정활동 성과가 지역 민원 해결인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이 중단된다면 위축받을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면 된다”고 전했다.

반면 진보당 소속 박형대 의원은 “의원들의 지역 민원 접수와 해결 과정도 공개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라며 “민원이나 지역 현안이 더 빠르게 반영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진보적 시스템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윤난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시민주권부시장이 20일 무안청사 왕인실에서 열린 ‘시·구·군 시민주권 및 주민자치 담당과장 소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 시민 제안 정책·예산에 반영한다

27개 시구군과 첫 소통회의…시민주권 실행과제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시민의 제안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고 추진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는 참여체계 마련에 나선다. 27개 시구군과 협력해 주민자치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올해 안에 현장에서 실행할 핵심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시는 20일 무안청사 왕인실에서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과 시군구 시민주권·주민자치 업무 담당 공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소통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시민주권 전담부서 신설에 맞춰 통

합특별시장과 시구군의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시민주권 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시민주권현장 제정 등 주요 과제를 살피고, ‘시민의 날’과 ‘시민의 노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지역별 의견을 나눴다.

이어 서복경 더가늌연구소 대표가 ‘통합특별시 시민주권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서 대표는 시민참여와 주민자치가 행정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시군구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지역마다 축적한 시민참여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시민 제안의 정책·예산 반영부터 추진 결과 안내까지 이어지는 절차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윤난실 부시장은 “시민주권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어야 한다”며 “올해 안에 현장에서 실행하는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주권의 가치는 제대로 구현하며 정책의 성과는 시민의 체감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27개 시군구와 상시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주권 정책의 현장 실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풍부한 전력, 주민 소득으로 이어져야”

박미숙 전남연구원 연구위원



“통합의 성과는 발전설비 용량과 투자협약 금액에 더해 실제 전력 공급, 공장 가동, 지역 기업의 수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박미숙 전남연구원 기후AI에너지연구실 연구위원(사진)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남광주의 에너지 전환이 기업의 생산과 수출, 주민 소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부한 발전자원을 보유하는 데서 나아가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전기를 공급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기업의 일감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단이다.

박 연구위원이 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공장 가동 일정에 맞춘 전력공급 계획이다. 지역의 연간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도 개별 공장에 필요한 전력을 제때 보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통합의 편익을 광주 신산업 유치에만 집중하면 동부권 수출기업과 협력업체의 전환 자원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전량 예측과 전력변환, 저장장치 운영, 설비 유지보수 등 발전과 소비를 잇는 기술·서비스 분야에서 지역기업의 납품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지역기업이 쓰는 ‘지산지소’에 대해서는 실제 공급 여건과 비용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소와 공장이 가까워도 생산·소비 시간대가 맞는지, 전력망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역에 발전소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의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낮아지는 구조는 아니다”고 말했다. 전력가격뿐 아니라 망 이용

반도체 팹 가동 맞춰 전력·용수 확보…지역기업 수주로 연결

동부권 수출산업 전환도 지원…주민배당은 실제 수익 토대로

그는 “공장 가동일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에서 얼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부터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과 계통운영 관계기관, 지방정부, 입주 기업이 공급 시점과 단계별 용량, 변전소·선로 건설, 인허가와 비용 부담을 하나의 계획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업도 최종 계획 용량을 한꺼번에 요구하기보다 착공과 장비 반입, 생산 확대에 맞춘 수요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공장과 AI 데이터센터 유치역시 업종별 운영조건을 검증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반도체는 연속공정에 필요한 전력 품질과 용수, 협력업체·인력 기반이 중요하고, 데이터센터는 통신망 이중화와 이용고객 확보, 실제 서버 도입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협약이나 건물 계획만으로 전력수요가 확정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산업 전환의 범위도 광주의 신산업에 한정하지 않았다. 서부권의 재생에너지 생산, 나주권의 전력산업·연구개발, 광주권의 첨단제조와 여수·광양권의 대규모 산업수요를 함께 연결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과 부족 전력 조달, 저장·운영 비용까지 비교해야 하며, 장기 전력계약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에는 수요를 모아 공급사업자를 연결하고 계약 검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민 이익공유에서는 피해 보상과 투자 수익, 지역사회 환원을 구분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피해 주민이 투자에 참여해야만 혜택을 받는 구조를 피하고, 투자 여력이 적은 주민도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배당의 재원도 발전소 매출 전체가 아니라 운영비와 금융비용, 원리금 상환, 설비 교체·철거 비용을 반영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상 발전수익을 정기적인 현금 지급의 확정 자원처럼 다루기보다 실제 사업 실적에 맞춰 환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연구위원은 “전력공급과 기업 투자, 주민 환원에 대해 담당기관과 재원, 기한, 성과지표를 함께 정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가 기준으로 전력공급 개시와 공장 가동, 지역 고용, 주민 소득 등 을 제안했다. 시설 운영비와 설비 교체비 등 재정 부담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세척력이 우수하고,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비닐하우스·차광페인트 제거제



고객센터 062.654.7896
010.7564.4706

이 메 일 tank10323@naver.com
홈페이지 www.kcsoap.com



광주공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북구 양일로 137-1

담양공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169

